대한언론

Korea Journal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대표전화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kjc1405@kjclub.or.kr

자매 On Line 매체
■대한언론 Knews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9 2026년 9월 1일(화) 제 486호

북미 3차 회담 11월 예정

트럼프-金 속셈에 한국 패싱 촉각



이재호
본회 신문편집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제공〉

한미연습-훈련 축소 성급한 느낌
페이스메이커 그럴듯 현실성 없어
백악관 목표 11월 중간선거 승리

트럼프 미대통령의 북핵발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그동안 북을 수차례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기는 했지만 핵무기 숫자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가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북·미관계 개선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 또는 취소됐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아시아? 설마?

그건 아닌 듯하고, 그보다는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가 더 급해 보인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나는 탄핵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 욕심도 있을 터. 2018년, 2019년 1, 2차 북·미회담 때도 이에 관한 관측이 많았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북은 핵 무력을 증강하는 쪽으로 매진했고, 핵 보유를 넘어 핵 고도화에도 일부 진전을 보이는 등 명실상부한 핵 국가가 됐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점은 비핵화에 모아져야 한다. '비핵화'가 제3차 북·미회담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하고 그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든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또 한 차례의 원맨쇼일 뿐이다. 회담은 춤추겠지만 결과는 북핵 묵인으로 끝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1, 2차 북·미회담 때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남북관계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더 소원해지도록 만들었다. 언제든 '한국 패싱'이 가능한 상황을 만든 셈이다. 우리는 1, 2차 북·미회담 때와는 다른 차원에서 더 가슴을 졸이며 11월 3차회담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거나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트럼프의 이런 행태와 움직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조금 성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교적 언사'이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풀릴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미 우리가 누누이 경험해 온 터이기도 하다.

〈6면에 계속〉

알림(社告)

『대한언론인회 50년史』 100字 발언 원고 모집

본회는 내년 2027년 4월 7일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광복과 전쟁, 혁명과 산업화의 격동기 속에서 언론 자유, 언론의 정도를 지키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로,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열정을 쏟아온 대한언론인회 50년, 그 소중한 언론사적 발자취를 종합, 『대한언론인회 50년史』를 4×6배판 700면 정도로 발간합니다.

컬러화보, 권두논문, 제1편 총론, 제2편 발전과 중흥, 제3편 언론과 공익, 제4편 출판과 문화, 제5편 미래비전 및 부록으로 엮기 위해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이며, 모든 원고는 9월 말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5편 미래비전' 중 〈미래를 향하여〉 장(章)을 본회 발전을 위한 회우 여러분의 고견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대한언론인회 50년史』〈미래를 향하여〉 100字 발언 ▲주제 ; 자유 발언(예 ; '대한언론인회와 나' 등 자유)

▲길이 ; 100字까지(字數-엄수) ▲마감 ; 선착순 100명. (단, 100명이 접수되는 대로 마감)

▲접수 ; 본회 이메일 kjc1405@kjclu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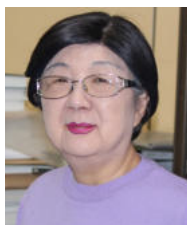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종세

李대통령 집 팔고 그 후… '셀러 파이낸싱' 위험



이자 오르고 대출 막히고 세금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살다 매도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 전경.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공동 명의의 분당 양지마을 60평형 아파트를 김모씨, 조모씨에게 29억 원에 매도했다. 현재 거주 중인 임대인의 보증금 1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17억7,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집을 팔았는데 그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해서 2명을 공동 채무자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10월 말 현재 임대인의 임대 만기일까지라 한다. 대통령은 대출금에 이자를 안 받기로 하고 대신 매수인이 증여세를 낸다고 했다. 국민들은 왜 어떻게 이런 매매가 가능한지 의아해했다. 매매한 건데 증여세를 낸다니 또 왜인가. 이자를 안 받는 이유는 서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인가.

그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되고, 대통령은 1998년에 매입했다. 준공 34년이 되어서 지난 7월 말에 재건축하기로 공식화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건축 대신 매도를 택했다. 여건상 재건축 참여가 불가하다는 이유다. 계약에서 완료까지 불과 이틀이 걸린 것도 이례적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며칠 후 서울 강남 아파트 부동산가에는 이런 말이 나돌았다. "25억 원에 우리 집을 사는 분께 10억 원 빌려드릴게요." "6억 원을 빌려드릴게요." 강남 지역은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가 적으니까 대통령의 이런 편법을 즉시 배운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싼 집 매매를 속히 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매매 방식에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대출)'이라는 새 이름도 붙었다.

매수인은 가진 돈만으로 금액이나 상환 기간에 한도가 없이 쉽게 빌리는 형식으로 원하는 집을 사는 게 장점이다. 매도인은 성사 기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석이조로 직접 사채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민 여론 부글부글…다음 총선·대선 부정적

그런데 대통령의 집 매도 후 2주가 지난 8월 3일, 정부는 부동산 세금 관련 시한폭탄을 터뜨렸다. 집을 급히 판 후 세금 폭탄 발표라니 이게 우연일까. 1가구 1주택자도 소유기간, 실거주기간, 시세를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를 현재의 최고 4배까지 인상한다. 매도 전의 대통령 부부처럼 집이 한 채인데 2인 공동 명의의 경우는 2주택자로 간주해서 세금이 2028년부터는 최고 7배까지 오를 수 있다. 똘똘한 고가의 한 채만 가진 사람도 투기꾼 취급이다. 이 개편이 국민들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총선, 대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8월10일 한국은행이 국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40대로, 대출 후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지출한다. 대출이 몇 년 전부터 크게 증가일로에 있다.

셀러 파이낸싱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안 받는 대신 '대출'한 듯이 소유권은 먼저 이전한 뒤 이자와 원금을 변제 받는 변칙 사적 금융 구조다.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부동산 공실 증가로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탓에 2020년 코로나 19 이후 올해는 최대로 대출은 늘고 부채 상환은 부진한 상황이다. 5대 은행이 3개월 이상 이자나 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깡통 대출금이 6월 말 현재 무려 6조4천108억 원이다. 그 결과 국민은행은 주담대 상한선을 종전의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대출 목표를 30억 원으로 했다가 10억 원으로 낮췄다. 금리는 부동산 조건에 따라 연 3~7%다. 상반기 중에 대출 예산이 거의 동이 나 대출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참신하고도 쉬운 대안이 관심을 끌게 됐지만 위험 가능성이 크다. 셀러 파이낸싱은 '할인'이 아니라 상환의무가 있는 '빚'이다. 은행 이상의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자는 과연 깡통 계좌 안 만들고 성실히 변제할 수 있을지 꼼꼼히 위험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증빙서류도 완벽하고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이 셀러 파이낸싱의 위험성을 보완하는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동안의 베일을 벗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암암리에 주고받던 부동산 물물교환이다. 지난 8월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총 305건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상반기(394건)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올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교환거래는 57건이다. 또 조선비즈가 8월 14일 보도한 내용에는 압구정동에서만 올해 40여건이 극비리에 교환됐다. 교환 상대는 같은 압구정동의 다른 아파트나 서초구의 비교적 최근 재건축한 고급 아파트들이다. 5억 원에 산 집을 10년 소유, 10년 거주하고 현재 50억 원인 경우 물물교환하면 양도세가 4억 원대인데 2028년에 팔면 11억 원을 내야 한다.

물물 교환은 결국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에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기 위한 묘책이다. 한 세무사는 이때 교환 전에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아 시세를 증거로 남겨야 위험부담이 없고 증여세 0원이 가능하며 양도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14.73% 1986년 이래 최고



이도선
본회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이재명 정권이 요즘 정신없이 허둥댄다.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다. 상승세가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첫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73%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최고다. 문재인 정권(9.41%)은 물론 역대 1위인 노무현 정권(11.68%)도 훌쩍 넘어섰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 왔다고 생각한다"(취임 1주년 기자회견)니 기가 찬다. 반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의 집권 1년차 서울 집값 상승률은 각각 1.78%, -1.44%, -8.58%에 그쳐 좌파 정권들과 대조된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는 공식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분석에 설득력이 실린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빗발치는 반발로 땜질 또 땜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개편안은 벌써 누더기가 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안을 이달 초 국회에 보내기에 앞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재입법예고 가능성도 내비쳤다. 13일에는 주택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으나 말뿐이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노·문 정권도 손대지 않은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겠다고 했다가 녹지를 보전하려는 서울시와 시민 3분의 2의 반대에 부딪혀 진퇴양난에 빠진 게 고작이다.

이 정권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등 잇단 수요억제책으로 시장이 되레 과열됐다는 지적에 아랑곳없이 여전히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세금 줄이고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던 대선 공약은 내몰라라 팽개치고 노·문 정권의 대실패작을 답습하는 꼴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바로 그렇다. 직장, 자녀 교육,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도 깡그리 외면하고 '비거주=투기'로 단정해 세금을 왕창 물리겠단다. 집을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지만 토허구역 실거주 규정과 정면충돌한다. 비거주 규제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는 또 다른 문제다.

투기와 전혀 무관하게 집 한 채로 30~40년 살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폭 축소라는 날벼락을 맞게 된 노년층과 문 정권 때 도입된 공동명의 특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부부들의 분노도 거세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추가 유예는 절대 없다"고 못 박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배제 조치를 3개월도 안 돼 뒤집고 조치 시행 이후 거래분은 소급 적용까지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작태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 준다"는 논리이지만 한 치 앞을 못 보고 국민을 우롱한 조삼모사(朝三暮四)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거듭된 대책에도 매물 잠김과 전월세 급등 같은 역효과만 기세등등하고 '청년모독', '중과세 국가 폭력', '고려장 세법' 등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권은 아연 혼비백산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가면 폭망'이란 탄식이 나오고, 한 여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아이디어랍시고 내놨다가 된통 혼쭐만났다. 정부도 뒤질세라 '고시원 욕조', '비(非)아파트 매수 지원' 등 하나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악수들로 청년들의 염장을 질렀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에게 "세금 올리면 욕먹으니 무조건 기어다니세요"라며 낄낄댄 것도 마뜩찮다. 세금 올리고 내리는 건 부총리가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란 기본 인식조차 없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한단 말인가.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울 집값 욕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하더니 올 1월에는 돌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큰소리쳤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 고지를 돌파하자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으로 내세우는 계곡 불법 시설 정비와 한데 묶어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을 빗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 급등은 반도체 특수와 국민연금 동원에 힘입은 것이고, 계곡 정비는 남양주시 실적을 가로챈 것이라는 비아냥이 시사하듯 믿을 만한 비유는 못 됐다. 실제로도 집값은 이후에도 속절없이 올랐다.

좌파가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건 억측이 아니라 수치로 입증되는 명제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조사한 역대 정권의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문 정권 72.75%, 노 정권 63.8%, 박근혜 정권 22.6%, 이명박 정권 -3.05%, 윤 정권 -6.15% 순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한 속내에서 드러났듯이 시장원리를 우습게 보는 좌파의 속성이 화근이다. 공급보다 규제에 치중하면 집값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지층이 아닌 부자들 때려잡으려고 무리수를 남발하다 집값만 올리자 "국민이 집없이 가난해야 정부에 매달리기 때문"이란 우스게도 나돈다. 이 대통령이 '공급 총력전'이라면서도 당장 30만 채 확보가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뒷짐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증세로는 안 된다는 그동안의 경험칙을 무시하고 또 매달리는 건 정책이 아니라 나라 망치는 아집이다. 우파 정권의 집값 안정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덕분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 시장원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망국병인 투기를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재명정부 부동산 못잡고 허둥지둥 '좌파 정권=집값 폭등' 공식 되풀이 增稅로는 안 돼 시장원리에 맡겨야

“검은 내부자들 살판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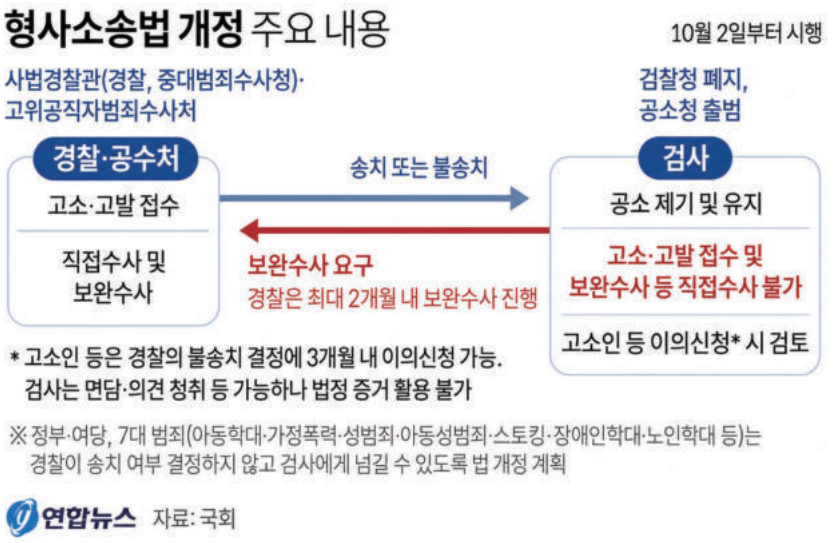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78년만에 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문관현
본회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수사·기소 분리…절차 복잡해 부작용 증가
사법비용 부쩍 늘어 ‘無錢有罪’ 실감할 듯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함에 따라 1948년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78년 만에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내려놓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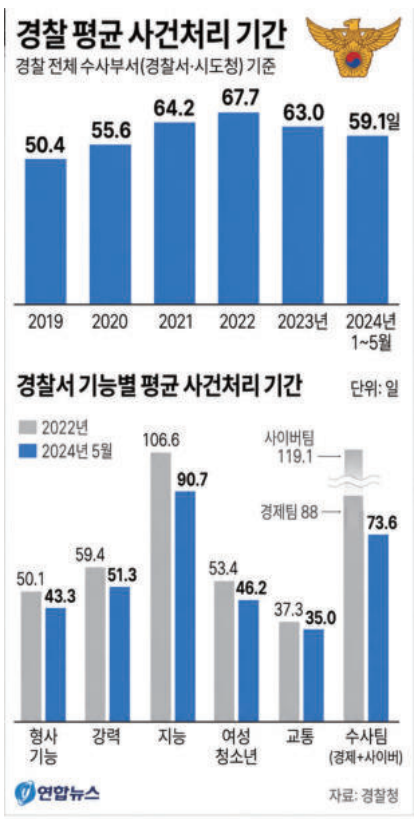
개정 형소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사법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의 검찰 인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 배치된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던 기존의 사법절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게 된다. 경찰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현재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문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 인권 옹호의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늦어지거나 공소 유지가 약화되며 범죄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서면 발표문을 통해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극찬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주도록 규정했다.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겉으로 보기엔 피해자 권리가 보장된 것처럼 주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현재도 경찰이 어떤 근거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경찰이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수사지연에 대해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다.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을 한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상 곤란하다”고 불허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절차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피해자의 사법비용이 늘어난다. 이에 민주당은 국선대리인(국선변호인)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선대리인을 붙여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보완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선대리인과 검사는 법적 지위와 권한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국선대리인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지만 국가의 공적인 형벌권을 행사하거나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 증거 수집의 권한이 없는 국선대리인이 경찰의 부실 수사나 불송치 결정에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엄연한 한계가 있다. 재력 있는 피해자들은 대형 로펌이나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형식적인 국선대리인에 의존해야 한다.

이외에도 언론 제보, 보완수사 요구,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경찰 내 수사 종결권 통제기구 강화, 고소·고발인 이의 신청권 유지 등이 대체 방안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러 대체 방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정치권이나 검찰 내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전국의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 전건 송치 등이 재검토 돼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복귀해 형소법 보완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형소법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정 장관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지적했으며 문제점을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는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대전환의 출발선에 서 있다. 사법체계 변화의 근간인 중수청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로 ‘개문발차’할 경우 수사공백과 인권침해 사례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기소권을 박탈하는데 있지 않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견제장치를 없애고 그 빈자리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로 채운다면 사법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종전선언·평화체제' 선언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8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면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전협정 3개 당사자인 북한·미국(유엔사)·중국 어느 나라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과거 그들의 대표적인 사전인 '백과전서'를 비롯한 모든 문헌과 보도선전물에 '종전·평화협정=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로 규정해왔다. 특히 그들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안'에 '종전'과 '평화협정'을 공산화통일의 필수조건으로 천명하는 등 6·25전쟁 정전(停戰) 이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한을 '두 적대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북한이 8월 들어서만도 6, 12, 20일 사흘에 걸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감안하면 다자회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는 11월 3일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등 국내외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15일 이후 이틀 연속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기대하는 듯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글을 올렸지만 이 대통령의 제의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16일엔 피트 헤그서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방침 지시에 이어 17일에는 백악관 취재진에게 자신의 미·북정상회담 제의에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왔다고 밝혔지만 역시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서만도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 전 대통령 때 여러 차례 추진돼 왔다.

1996년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렸다. 실제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4자회담이 여섯차례 열렸으나, 북한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결국 결렬됐다. 2006년 1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이듬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과 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종전 논의가 국제무대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정책 방향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27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했고, 김정은이 2023년 이후 남북한 '두 적대 국가론'을 펴며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남북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무력통일하겠다는 방침은 불변)는 입장을 공식화 함으로써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물거품이 됐다.

김정은 8월에 미사일발사 3번 콧방귀 일관 핵 고도화 시간만 줘… "한심한 구걸" 논평도

문제는 북한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기들의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평화체제 논의는 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는 반면, 우리 안보의 주요 축을 무력화하는 자해적 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구걸'"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종명선언(終明宣言)이라고 맹공했다.

무엇보다 정전체제의 종전체제로의 전환은 유엔군사령부의 몫으로 그 존속과 관련된 문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존재 이유를 잃고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유엔사가 사라지면 일본 내 후방기지 7곳을 통해 유사시 아·태지역에 전력(戰力)을 신속히 투입하는 지원 체계도 무력화 된다. 그 다음은 주한미군이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 따라 주둔하지만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조성되면 "전쟁이 끝났는 데 왜 미군이 필요하냐"는 정치적 압박이 미국이나 한국 종북좌파 내에서 조성되거나, 동맹 자체를 흥정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이 취약한 구조는 실제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몇 평화협정이 전쟁 재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있다. 보스니아 내전을 종결한 데이턴평화협정(1995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베트남평화협정(1973년)에서 보듯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었다. 베르사유 강화조약(1919년)이나 뮌헨협정(1938년), 영·독 불가침조약(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1939년), 일·소 중립·불가침조약(194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1993년)은 모두 위장 평화조약으로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이어졌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 비판 나와도

김민석 明淸내전서 당대표 뽑혀…취임 일성이 사법부 압박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혈투와 내전으로 점철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서 김민석 직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김 대표는 54.08%로 45.92%의 정청래를 눌렀다. 임기 2년으로 2028년 총선을 치른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선 전례 없는 과열 네거티브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적자, 파묘 논쟁으로부터 시작해 독설·극언·인신공격이 넘치는 혈투의 내전이었다. 비전과 민생대책은 없고 상대 후보 헐뜯기에만 집중한 난장판이었다. 집권 여당다운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 역사상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이번처럼 드러나게 지원한 적도 없었다.

당 대표 선거기간에 후견인 간의 지원대결도 이채롭고 흥미를 끌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책까지 동원해 적극 지원했고, 정청래 후보는 진보의 대표적인 예리한 논객 유시민 작가가 때맞춰 날카로운 언어로 대통령을 저격했다. 무대와 막후에서 이중으로 혈투가 전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리당원의 34%를 점유하는 호남 표를 의식해 8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호남단지를 경제논리보다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호남 반도체 단지가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국가 미래가 걸린 경제정책이 민주당 대표 선거의 인질이 된 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김 후보는 일부 유보를 주장하다가 강성당원을 의식해 슬그머니 국회에 맡겨버렸다.

유 작가는 여의도에서 “옳은 말을 가장 싸가지 없게 말 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 중 한층 사나워진 말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아니 저격이었다. 유 작가는 지난 5월 “대통령 연임은 불가하다”로 포문을 연후 대통령 공소 취소 여당모임을 “미친 짓이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민주당을 증축해야 하는데 재건축하려 한다”고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비판했다. 당원을 ABC로 구분하고 B그룹을 기회주의자로 성토했다.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세 한다” “어물전의 싱싱한 생선도 비린내 나지만 썩은 냄새 나면 안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 한다”로 마침표를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서미화 최고위원의 장애인 인권 관련 발언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처럼 ‘명청대결’이 비등점을 넘을 정도로 과열되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옆에만 있어도 데일 것 같다. 이러다가 당 기둥뿌리 뽑힐 것 같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전당대회가 뜨겁다 못해 폭파직전”이라고 했다. 당 내에선 전당대회 후 ‘친명’ ‘친청’ 두 파가 함께 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김민석 당 대표는 취임 일성이 사법부 압박이었다. 첫 최고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 태도”라며 “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3권 분립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직함 대신 씨로 부르는 무례함을 보였다. 사법부 성토로 출발한 김 대표는 부동산 등 민생대책보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소취소 등 법률에 속도전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직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다시 거론했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 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이 공소취소로 6·3지방선거에서 민심이반으로 상처를 입었는 데도 다시 깃발을 들고 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함께 김 대표의 첫 임무가 민생 아닌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김민석의 당 대표 당선으로 이 대통령의 일극체제가 됐다. 김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협력의 창조적인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창조적인 수평관계는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전면협력은 자칫하면 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김 대표는 “당을 바꾸겠다”면서 생활여력, 확장, 경쟁력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대표의 의도대로 하기에는 당내 세력분포가 만만치 않다. 최민희 수석과 이성윤, 한민수 3명의 친청계 최고위원이 버티고 있다. 최고회의 첫날부터 최 수석은 “민심이 당심을 이겼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 대표보다 앞선 것을 은연중 상기시켰다. 사흘째 강릉 최고회의에선 김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친명계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일방통행식 방식이자 당헌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총선과 다음 대선도 어렵다. 전당대회 기간 중 이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민주당도 하강했다. 당 대표 선거 내전으로 만신창이 됐다. 여당구실도 못했다. 더욱이 청와대의 전폭지원으로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 자석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에 이어 당 대표에 오른 김 대표의 지향점은 한자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김 대표로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

〈1면에 이어서〉

대통령은 자신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개념까지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님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슬로건은 항상 멋지지만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을 다 주워 담지는 못한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몰래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 핵에 기대어 한국과 자유세계를 여전히 옥죄고 있다. 이 엄연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상대를 대북 강경론자나, 또는 유화론자로 몰아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정교한 교집합이 필요할 터인데 이 정권에선 ‘자주’(自主) 밖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입만 열면 자주, 자주, 하는데 자주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맹을 깨는데 있다는 우스게 소리도 있다.

트럼프의 대응 여하에 따라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 한 쪽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벌써 학계 일각에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고, 육지가 아닌 해상에 핵을 둠으써 우리도 핵억지력을 갖자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간 핵억지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 왔지만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거나, 북한으로부터의 핵 도발 위협이 가속화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각의 주장대로 우리도 핵무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구멍을 내는 것이어서 몰고 올 파장이 상상하기 어렵다.

트럼프와 잘 지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잘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숙의에 기초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에게도 통하고, 트럼프를 넘어서도 통할 그런 원칙과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트럼프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에 그런 원모심려(遠謀深慮)와 대비가 담겨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전작권은 빨리 엇박자 훈련은 느리게

韓 군사주권 美 방어능력에 방점
北 핵무력 고도화 현실 직시해야



류종현
본회 편집위원,
전 MBC워싱턴특파원



한·미 양국 장병들이 합동훈련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UFS 축소가 드러낸 한·미동맹의 불편한 현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지금의 한·미관계를 들여다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그 역설은 한마디로 전쟁 지휘권을 넘겨받기 위한 시계는 앞으로 돌리면서, 그 지휘능력을 시험할 훈련의 시계는 뒤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이 대폭 축소된 것은 그래서 단순한 훈련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논리와 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군사적 조건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시험 날짜를 앞당기면서 시험과목을 줄이는 격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통신망이 공격받고, 지휘소가 타격당하고, 미사일과 무인기가 날아들며, 수많은 정보와 오정보가 동시에 지휘부로 쏟아진다. 그 혼란 속에서 동맹군이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는 회의실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없다.

군대의 능력은 계획서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에서 증명된다.

지휘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 그 지휘권을 행사할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부터 줄인다면, 이것은 자주국방의 진전이 아니라 자주국방 논리의 자기모순이다. UFS 축소를 바라보는 서울과 워싱턴의 시선이 반드시 같지만은 않은 이유다.

한국에서는 연합훈련 조정을 남북관계 관리나 긴장 완화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바라보는 기준은 훨씬 군사적이다. 유사시 미군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실전 준비다. 그래서 평시에 충분히 함께 훈련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군사적 요구다. 여기에서 한·미 간 인식의 간극이 커진다면 문제는 동맹을 바라보는 북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왜 여야가 함께 우려하는가

미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약화시키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민주당에서도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미국 의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있음에도 한반도의 억제력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문제에서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을 넘겨받겠다는 동맹국의 군사작전 능력을 검증할 훈련은 왜 줄이는가."라는 핵심적인 그들의 질문이 감지된다.

이 질문에 우리 정부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한·미 간 군사협의의 차원을 넘어 동맹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권은 '군사주권', 미국은 '방어능력'을 묻는다

한국 정치권의 전작권 전환 논쟁과 미국의 시각 사이에도 미묘한 간극이 감지된다.

국내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군사주권 회복'이나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세계적인 경제·군사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미군 장성에게 전시 지휘를 맡겨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우리의 작전통제권은 한국동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미군사작전을 지휘해 승전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유럽나토군도 전시작전지휘권은 연합군사령관인 미군이 행사한다.

그리고 전쟁은 자존심으로 치르는 연습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지휘관의 국적이 아니라 어느 지휘체제가 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자체보다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느냐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동맹의 역사를 보면 균열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거대한 댐이 쥐구멍의 누수로 무너지는 것과 같다. 훈련을 둘러싼 이견,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차이, 방위비와 주한미군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하나씩 쌓이면서 서로에게 의문이 생기고 그런 의문이 마침내 불신의 씨앗이 되어 균열을 낳게 된다.

더구나 지금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합방위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대폭 축소된 UFS 연합훈련도 바로 그런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전작권 전환도 한국군이 충분한 지휘능력을 갖추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체제로 발전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환 날짜를 먼저 어떤 정권의 임기 내라고 정해놓고 능력을 거기에 맞추는 것은 구두에 발을 맞추는 것이고 따라서 능력을 먼저 완성하고 검증한 뒤 전환하여 발에 구두를 맞추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북한의 핵무기는 점차 고도화되고 우리의 정치일정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한·미동맹은 일단 유사시 양국 의회의 절차적 승인을 받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절차적 개입의 구조를 갖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지휘통제 능력,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 대북 핵·미사일 대응, 연합작전 수행능력 등을 실제 훈련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군사적 검증 과정이다.

올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의 야외 기동훈련이 크게 축소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직결되는 핵심 연습 일정까지 줄인 것은 전작권 전환의 논리와는 상반된 모순이다.

한국은 미국에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요구하면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방위책임과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는데 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시간표에 맞추려 한다면 양국의 전략적 시계는 점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서태평양에서 군사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레거시언론에서 '올림픽공원 집회' 뉴스를 보고 싶다



올림픽공원 집회가 3개월여에 걸쳐 계속 열리고 있다.(사진 심의표 회우)



심의표
본회 편집위원
전 KBS부산총국장

A일보를 끊었다.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무던히 참아왔다. 딱히 구독 시작 날짜를 꼬집을 순 없지만 대충 잡아도 40년 넘게 보아온 신문이었다.

구독 중단 요청 전화를 건 날이 지난 7월 6일, 월요일이었다. 그날 아침 신문을 열어보니 1면 머리에 실린 대문짝만한 사진 2장이 눈에 들어왔다. 왼쪽엔 미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DC의 폭죽 사진, 오른쪽은 하메네이 장례식 날 조문객이 운집한 이란 테헤란 광장 사진이었다. 국제적 빅 이벤트는 그렇다 치고 우리에겐 그날이 어떤 날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올림픽 공원에서 2030 젊은이들이 '참정권 회복'을 외치며 집회(이하 '올공집회')를 이어온 지 31일, 꽈 찬 한 달이 되는 날(7월 4일)이었다. 6월 4일 이후 내내 침묵하던 A일보도 이날만큼은 기사 한 줄이나 사진 한 컷이라도 싣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2면, 3면… 끝까지 지면을 훑어보았다. 눈을 씻고 보아도 역시 '올공집회'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허탈감? 먼 나라 독립기념 축제와 장례식은 떡하니 1면에 올리면서 막상 한 달 간 이어 온 우리 젊은이들의 절규에는 마이동풍, 끝내 눈과 귀를 닫는 언론. 참아오던 화가 치밀어 구독 거부 전화기를 들었다.

8일 전남광주 구례군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모기장 영화음악회'에서 관람객들이 모기장 안에서 공연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잊고 있다. 주말 새 '극한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전국의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다.(B일보 제공)

B일보로 바꾸어 구독한 지 딱 열흘이 되던 날이었다. 지난 8월 10일(월) 아침 일찍 신문을 보다 사진 한 컷(A14면)에 시선이 꽂혔다. 사진 아래 기사 제목이 재밌다. "산사에서 열린 '모기장 영화음악회'" 사진 설명 일부를 옮겨본다. "(이틀 전인) 8일 전남 광주 구례군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모기장 영화음악회'에서 관람객들이 모기장 안에서 공연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잊고 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쳤다. 이 멋진(?) 사진을 실은 B일보는 두 달째 이어지는 '올공집회'에 대한 기사나 사진을 어떻게 다뤘을까? 한 쪽에선 누군가가 쳐준 예쁜 모기장 안에서 낭만적인 여름밤 음악제를 즐기는 현장, 또 다른 한쪽에선 뜨거운 뙤





A일보가 7월6일자 1면에 실은 미국 워싱턴(왼쪽)과 이란 테헤란 사진(오른쪽)

6·3地選 참정권회복 운동 3개월여 계속
엄연한 팩트 외면 …언론본연 책무 뒷전

약볕과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아가며 두 달 넘게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쳐대는 현장 - 두 곳 모두 우리 젊은이들이 현장의 주역들이었다. 열흘 전, 구독신청을 할 때 일정 기간 구독료 면제를 받는 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 구독하겠다는 약속만 하지 않았다면, 그날 당장 다른 신문 구독을 신청할 뻔했다.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는 '올공집회'에 대해 드물게 J일보가 현장스케치 식 상보를 기사(7월 17일자 L모 기자)로 다뤘다. 취재 기자가 직접 촬영한 '올공 동산 빨랫줄 샷' 등 현장 사진도 3장씩이나 올렸다. 그러나 기사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저 X 잡아라' 싸움에 술판까지… 아수라장 된 제헌절 올공 집회"라는 비속어가 섞인 제목이다. 기사 내용은 몇 술 더 뜬다. "올림픽공원 점거 시위 현장에서 술판과 절도, 싸움이 속출하고 있다.", 올림픽공원은 '시위대가 점령 중'이고 공공기물은 '시위대가 붙여놓은 피켓 등으로 뒤덮여' 있을뿐더러, 고령의 참가자들은 "멸공' 마크를 가슴팍에 달고 캔 맥주를 들이키고 있다'고 썼다. 이 기사가 지적한 '올공 집회' 현장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질서와 혼돈, 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 그대로다.

필자는 집회 참여자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주말에 다섯 차례 올공 현장을 다녀 왔다.

L 기자가 잘도 찾아낸 (볼썽사나운 불법·탈법) 장면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돼 2030 젊은이들의 '참정권 회복운동'으로 시작된 '올공집회'가 3개월여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불붙기 시작한 올공 불길은 중앙선관위 규탄과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로 번지면서 그 기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갈수록 드세지는 추세다. 2030 세대가 주축을 이루었던 집회 참여자들은 중·장년층은 물론 노년층까지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 참여도 부쩍 늘어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이 진원지가 되었지만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 각 지방의 중·소 도시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거관리위 해체와 부정선거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신문, 방송 등 이른바 레거시 언론의 지면이나 TV 화면에 이러한 현장을 제대로 전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종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본 독자가 있는가? 최소한 필자가 7월 말까지 구독한 매체에는 '올공집회'나 이와 관련된 기사나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본 적이 없다. 매일매일 숱하게 쏟아내는 그 흔한 사설이나 칼럼이 진지하게 '올공집회'를 다룬 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창간 100년이 넘는 긴 역사와 전통을 앞세우며 정론지를 자임해온 신문의 실상이 이럴 진대 전국 200여개에 이르는 다른 종이신문 지면(모두 확인은 해보지 못했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싶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종이신문은 지면이 한정돼 있어 '올공집회' 관련 기사와 사진은 인터넷 판으로 돌려 다루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신문 인터넷 판에 '올공집회'가 단편적으로 실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독자들이 온통 바보로만 보이는가? 독자들 눈에는 이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왜곡된 선택적 편향성을 감추기 위한 '궁색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한 변명'으로 비칠 수도 있다.

언론이 엄연한 팩트를 외면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면 독자는 여지없이 그 언론매체를 버리고 SNS 등 대안매체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뒤따르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건강한 소통과 토론은 사라지고 사회적 불신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모두들 확정편향의 늪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첫째도 둘째도 말…말…말조심

'육사 쿠데타' 발언 정치적 갈등 불러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은 2가지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다. 하나는 발언 자체의 적절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단서(端緖)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했다.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라도 육사,해사,공사 등 3사관학교의 통합은 필요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했고,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지금 생도와 예비 생도들에 대해 쿠데타 예비세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도 3사 동창회장들과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쿠데타로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다 처벌을 받았다"며 "지금 생도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한 법조인(신익호 변호사)은 블로그를 통해 "쿠데타는 '육사'라는 기관이 아닌 박정희, 전두환 등 극소수의 정치군인들과 '하나회'라는 비밀사조직이 일으킨 것으로 이 조직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해체함으로써 제도적 책임은 이미 30년 전에 물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대통령은 그 이후에 태어난 육사 생도들과 장교들에게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최고통수권자가 특정집단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말(언어)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서게 되고…최악의 경우 군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3사 통합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국민의 기대 또한 컸던 게 사실이다. 한국갤럽의 향후 5년간 직무수행 조사에선 '대통령이 잘 할 거'라는 응답이 무려 70%였다. 국민은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일궈낼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했다. 그러던 게 겨우 1년여가 지난 요즘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해 38.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락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대통령은 혹여 '육사 쿠데타' 발언과 같은 말실수를 자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안의 전체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하기보다 한 부분, 특히 해당 조직이나 기관의 일탈(逸脫)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거나 단정짓는 것은 아닐까. '육사 쿠데타' 발언처럼 말이다. '일탈'을 지적하고 막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박수를 받는다. '날카롭다' '칼같다'는 평가는 또래에서 얻을 수 있는 드문 찬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직의 수장이라면 '일탈'을 지적하는 날카로움에 앞서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검찰을 보자. 평소 욕도 먹고 때로는 기소에 정치적으로 기우는 면이 있었다고 해도 검찰은 건국 이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3권 분립에 따른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범죄피해로부터 보호 등 3대 임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역사와 과정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어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주류(主流)의 의식이고 대처방법이다.

검찰·부동산 등 크게 보는 안목 필요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그런 아량과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논란처럼 나라가 갈라지고, 끝내 법무부장관이 사퇴하기에 이른 것 아닌가.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비근한 예로 다주택자들이 왜 생겼을까.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걸 무시하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몰면 해법이 나올 리 없다.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단정 짓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끝이 없다.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진입억제 장벽)은 극과 극인데,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나 가격 하락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와 원전, 댐 건설은 기후변화를 막자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탈원전 댐건설 억제와도 이율배반적이다. 이처럼 상충되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 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헌 얘기는 그치지 않는다. 처음엔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국민 간보듯 흘리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복안까지 내비쳤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떤 대통령도 취임 1년여 만에 이런 식으로 개헌을 들고 나온 적은 없다. 벌써 야당에선 '이재명 집권 8년을 위한 개헌'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정국은 좀처럼 강경 대치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

여야를 떠나 대통령이 국가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도 둘째도 말을 아껴야 한다. 일탈을 지적하는 데서 희열을 느낄 게 아니라 격려하고 공감하는 데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육사 쿠데타' 같은 말을 더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재호(본회 신문편집위원장)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말 아껴야

‘빈총 경계’…서부전선 이상있다



휴전선 가운데 가장 넓고 높은 고지를 지키는 육군 백두산부대 최전방 초소의 한 장병이 불밝힌 철책 앞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명우
본회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접경 이웃나라에 관심이 컸다. 앨리스가 마침 그 이웃나라를 방문했을 때 바로 눈에 띄는 큰 플래카드에 이런 구호가 적혀 있었다. “총알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총알을 살린다면 총은 발사될 일이 없다. 그렇다. 총을 무력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앨리스는 생각했다. “여긴 내가 사는 나라보다 훨씬 더 이상한 나라야….”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3막짜리 오페라 ‘마탄(魔彈)의 사수’는 백발백중의 마법총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탄은 총에 장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마탄도 아닌 일반 탄환조차 총에 삽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어디다 쓸 물건인고.

조선일보 사설 파문

최근 조선일보가 꽤 자극적인 사설 하나를 내놓았다. 지난 7월 29일자 ‘실탄 없는 중기관총으로 GP 경계 서는 軍’이라는 제목이었다. 내용 역시 자극을 뛰어넘는 꽤 충격적인 것이었다.

“서부 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전방감시초소(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뺀 채 경계 작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부터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두고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게 했다고 한다. 북한군 고사총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곳에서 즉각 대응을 어렵게 한 것이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실탄을 더듬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탄 뺀 기관총’은 북을 향한 오발사고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살피는 속에서 오로지 방어 임무만 생각해야 할 최전방 사령부까지 ‘정무적으로’ 영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전방 GP와 GOP에서 우리 군이 실탄도 없는 ‘빈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했다는 이야기로 파악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연상을 떠올리게 한다.

무뎃뽀는 ‘むてっぽう’라는 일본어이다. 총이 없다는 말로 총도없이 칼을 휘두른다는 것으로 앞뒤 생각없이 무턱대고 행동하는 모양, 분별이 없음, 무모함을 일컫는다. 일본의 사무라이와 연관된 말이다. 원래 일본의 사무라이는 귀인(貴人)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이를 경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자로 시(侍)라고 쓴다. 헤이안(平安)시대 이후 이들 무사계급이 성장하면서 영주나 지배자의 경호를 위해 무사를 채용하자 점차 특수집단으로 세력과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역사를 관통하며 강렬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 사무라이는 화약의 발명과 총기의 등장으로 현실에서 사라진다. 총 앞에 무력해진 이들 칼의 주인공 사무라이들의 일부는 갈 곳을 잃고 떠도는 신세가 됐다. 실직 무사 낭인(浪人,료닌)이라 지칭되기도 했다.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무라이라도 총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들은 총이 없기에 ‘無鉄砲’였다. 그렇다면 이 무뎃뽀와 총알 없는 빈총 무탄총이 대결한다면 누가 이길까. 이 때는 무뎃뽀가 우세하다. 위력적인 칼이라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서부전선에서 무뎃뽀도 아닌 무탄총 사태를 불러온 사연은 무엇일까.

관련 뉴스들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북 긴장완화 분위기 때문에 군이 실탄까지 빼버린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사건은 1군단 예하 GP·GOP의 K6 중기관총 운용 문제에서 비롯됐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K6를 평소 실탄이 결합된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탄약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계근무를 해왔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전방 경계근무의 기본 원칙으로 정한 운용방식과 달랐다. 더욱이 합참이 이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확대됐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GP와 GOP는 후방의 일반 부대와 다르다. 북한군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상황이 발생한 뒤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대응해야 하는 곳인데, 합참이 정한 즉응태세의 원칙은 지켰느냐 하는 점에서 눈총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1군에서는 왜 이런 엉뚱한 사태를 빚은 것일까.

북한에 오발사고 우려해 올 상반기부터 시행
합참, 사전에 보고 못받아…당나라 군대 될판

오발 사고가 걱정된다면 답은 단순히 탄약을 멀리 두는 것만이 아니다. 교육·점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을 것이다. 전투준비 수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면 결국 다른 위험이 생긴다. 전방 핵심부대에서 합참과 다른 경계지침을 적용했고 상급 지휘체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언론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한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도 타당하다. 다만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군이 북측으로의 오발을 지나치게 우려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바로 확인된 사실과 정치적 해석을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은 1군단에서 기존 원칙과 다른 운용방식을 적용했고 합참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가 이후 관련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팩트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별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방은 실탄이 원칙”이다

그래도 이번 사건 덕분에 중요한 문제가 밖으로 노출됐다. 대한민국 최전방의 실탄·화기 운용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확실히 정답이 나와야만 한다.

‘빈 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전방 군인들이 어떻게 실탄도 없이 북한과 맞서왔나’ 하는데서 오는 연민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오해인지, 규정 위반인지, 구조적 허점인지도 투명하게 조사해야 마땅하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 외에도 K2 소총 등 개인화기까지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다면 과연 정상적인 경계가 맞나? 안보는 1분 1초의 실제 대응능력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무색하다. 무총, 유총은 지휘관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실탄이 없어 무뎃뽀가 되다니…이 무슨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요, 안보 포기 행위다. “전방은 실탄이 원칙”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널뛰기 證市…개미들 哭소리 50조 손실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이드카 올들어 22회 발동 급등락 다반사
정책 갈팡질팡에 땜질…국정지지율도 하락

요즘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계좌 열어보기가 겁난다고 말한다. 한때 글로벌 상승률 1위까지 올랐던 한국 증시가 지난 6월 중순 이후 급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되기 때문이다. 매도·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후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도·매수가 5분간 효력을 정지한다. 8월 중순 현재 매도 사이드카는 올 들어 무려 22회나 발동됐다. 그만큼 한국 증시의 변동 폭이 크다는 증좌다. 이 같은 증시 급등락에 투자자들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로 인한 어지럼증이다.

한국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실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출시한 상장지수펀드(ETF)가 가뜩이나 불안한 한국 증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종목의 일간 변동성을 두 배 이상 추종하는 고위험·고변동성 상품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특정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을 자극하고, 증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각종 ETF 가운데 특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섹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다. 이 상품은 고환율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투자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얼마 전 도입됐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이들 2개 종목에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하고, 증권사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금융시장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든 (ETF 도입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하는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말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와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 가치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번 ETF 사태에서 보듯 금융당국의 행보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을 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 처방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수장이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고, 승인했어야 할 상품을 두고 사후에 공적으로 도입 실패를 자인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선뜻 한국시장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금융정책 실패 발언 이후 당국의 사후 규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결국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 지수가 22%나 폭락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액만도 5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코스피 급등락과 개미 투자자 피해를 두고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외신 보도까지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대통령은 뜨거운 주식시장을 원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얻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코스피 폭락을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기조와 연결시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에 몰려있는 가계 자산을 증시 등 생산적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행한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에는 코스피 8,000선 육박을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증시의 혼란상태가 거듭되자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말 허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지난 7월31일 잠정 중단했다.

규제 이후 과열 양상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규제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대금은 3조1,000억원대로 줄었다. 직전 거래일의 4분의 1 수준이다. 8월 들어서는 거래 대금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1조2,000억 원까지 내려갔다. 규제 시행 직전과 비교하면 거래 규모가 사실상 10분의 1로 축소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도 주가가 전 고점 대비 반 토막 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주가 방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통해 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한 추가 주주환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와 관련한 법적 제약이 풀리는대로 주주환원 방침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은 사전 공시 없이 즉시 매수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 규모인 48억 원어치의 SK하이닉스 주식을 최근 사들이며 주가 방어에 나섰다.

요즘 국내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장(한국 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국 증시는 믿을 것이 못돼 미장(미국 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기겠다는 개미들의 한 서린 푸념이다. 동학개미보다는 서학개미가 돼야 요즘 같은 롤러코스터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상승률 수위를 기록하던 한국 증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가졌단 말인가.

최근 국내 증시 급변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됐다.

김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관련, 국내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김 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낮아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국내 증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금융당국은 조변석개 식 땜질처방 말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증시 부양책을 내놓기 바란다.

BTS 폭탄선언 '아리랑' 신명으로 그래미賞 출품 "NO"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

세계의 대중 음악계에서 그래미상의 권위는 군주의 왕관처럼 존경받아 왔다. 당대의 팝 아티스트들이 내놓은 음반 판매량이나 음원 스트리밍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업계의 인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1957년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한해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누가 주류인가를 판정하는 권한은 비밀에 싸여진 그래미상 후보 검토위원회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2026년 7월 29일, 그 왕관을 향해 대한민국의 한 팝그룹이 마치 폭탄 투하를 연상케하는 엄청난 선택을 했다. 지금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공연무대를 휩쓸고 있는 BTS가 2027년 2월 7일에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컴백 앨범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이다.

7인의 멤버는 각각 자신의 인스타 계정을 통해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가 사랑받기를 바란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 출품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방탄소년단의 열성 팬클럽 아미(ARMY)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BTS가 2027년 2월 7일 열리는 시상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러한 출품 거부는 가수가 그래미 왕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최초의 사례"라고 긴급 뉴스로 전했다.

그래미 측은 지난 6월 16일 그래미가 '베스트 아시안 팝뮤직 퍼포먼스' 등 5개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면서 K팝은 물론 J팝과 C팝 등 아시아 음악을 모두 포함하는 의도에서 신설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열성팬들은 "본상은 영어권 가수들에게 주고 BTS와 로제 등 아시아 출신 팝스타에게는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따로 만든 아시아 상을 주겠다는 포석이 아니냐"는 반론을 펴기 시작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BTS에게 그래미는 꿈에서만 그려온 가장 높은 문턱 가운데 하나였다. 언어와 인종 장벽 등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영어로 부른 '다이너마이트'를 앞세워 미국 무대 진출에 성공한 7인 멤버는 2019년도 그래미 시상식에 처음 초대되었으나 수상자가 아닌 R&B 부문 시상자 역할이었다.

이어 2021년부터 3년 동안 팝 듀오·그룹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뽑혀 시상식과 축하공연에 참석했으나 하나의 상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무대를 내려온 전력이 있었는데 가장 본상 수상이 기대되는 2027년 시상

급조 '아시아팝뮤직 賞' 홀대에 거부
절대권력도 시대변화에 따라야 일침

식을 앞두고 '아시아 팝뮤직'이라는 예상 밖 암초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미는 물론이고 동서양의 대중 음악계는 현재의 BTS를 과거의 BTS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세계 무대에 나타난 BTS가 3월에 발표한 5집 앨범 '아리랑'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또 5월 25일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포함, 3부문의 상을 받았고 7월 20일엔 윔블던컵 결승 하프타임 무대에서 마돈나, 저스틴 비버, 사키라와 함께 화려한 공연을 펼친 후 무려 3천만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컴백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5대륙 23개 국가 34개 도시에서 세계 순회공연에 들어간 BTS는 1회 공연 당 무려 10만에 육박하는 유료 관객을 불러모으는 대기록을 세워 왔다. 매번 입장 티켓이 발매 10여 분 만에 매진되자 표를 구하지 못한 열성팬 수만명은 공연장 밖에 모여 떼창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진풍경을 이례적으로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BTS를 마이클 잭슨에 버금가는 역대 최고의 아티스트로 극찬하며 그래미가 국적이나 인종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특히 출품 포기 선언이 나온 직후 그래미 측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등 베스트 영상 2개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보복성 꼼수가 아니냐는 음악 애호가들의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다. 이들은 단순히 동경하는 가수의 음반을 소비하는 팬들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음악산업의 구조와 시상식의 공정성까지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팬덤 조직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일까? 8월 중순에 들어서 그래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아시아 팝뮤직 부문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등장했다. 구체적인 후속 발표는 아직 없지만 그래미의 파트너 기업에 항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시상식 중계권을 확보한 CBS의 광고주 일부가 광고 취소를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또 본상 수상자를 선출하는 1만 2,000 명 투표인단 중 일부 그래미 아카데미 정회원들이 미국 본부에 이례적인 항의문을 보냈다는 소문도 등장해 그래미는 이래저래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세상의 권력은 꼭 무너져야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그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성격이 바뀐다. 이번 사건은 그래미가 BTS에게 "너희를 인정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구조에서, BTS가 그래미에게 "어떤 방식을 받아들일지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말하는 구조로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는 느낌도 든다. 그래미의 권위가 강했던 시대에는 뮤지션이 그래미의 평가를 기다렸다. 이미 세계의 음악시장이 달라진 지금은 그래미 역시 아티스트에게 평가받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의 BTS의 출품 거부 사건은 시대의 변화를 애써 외면해 온 그래미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상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어째서 그 상이 필요한 것인지 관계자들을 향해 진심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미는 물론 오스카, 베니스 등 오랜 전통의 국제 예술 행사도 제왕적 아집과 프리미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신선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왕관을 포기한 아티스트의 진심을 읽고 누가 왕관을 만들고 누구에게 씌워야 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묻기 시작할 시대라고 생각한다.

특파원 수첩 런던 17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 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공주 영상 정보대학 교수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 이사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정 경기 '보트 레이스'.

옥스퍼드 文科 강세 理科 명성 케임브리지

지난 4월4일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 강변에는 30만 군중이 몰려들었다. 영국 최고의 두 명문대학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간 보트 경주를 구경하기 위해서다. 퍼트니 다리 밑을 출발, 강 상류를 따라 치직 다리까지 6.8 Km를 노 저어간 이 보트레이스에 강둑에 모인 영국인들은 흥분하며 열광했다. 근처 공원에는 대형 스크린, 푸드 트럭, 어린이 놀이시설에 공식 '팬 파크'까지 조성되어 시민들이 하루종일 먹고 즐겼다. 이날 하루만은 물가고와 불법이민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치안 불안도 잊은 듯, 강변의 펍이나 풀밭에 모인 군중들은 여름 칵테일 핌스나 시원한 에일 맥주, 피시앤 칩스를 들고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지성인들의 이 야성적 대결에 런더너들이 열광하는 것은 이 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이 아니다. 학교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소시민들. 그들이 흥분하는 것은 이 레이스가 바로 새봄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겨울이 유난히도 길고 음울한 것은 유명하다. 그러나 바로 이날 경기를 시발로 하여 각종 스포츠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짙은 푸른색(옥스퍼드)과 엷은 푸른색(케임브리지)을 입은 대학생들의 경기라 하여 '푸르름의 대결'(Battle of Blues)이라고 불리는 이 경기는 두 학교 간의 자존심을 건 숙명의 라이벌전. 채널 4 TV에 의해 중계되어 전 세계 50여 개국 1억여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올림픽 조정 경기 코스(2km)의 3배가 넘는 엄청난 난이도에 (경기장 레인이 아닌) 템스강의 자연 물길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거칠고 박진감이 넘친다. 올해로 171회째를 맞은 이날 대결에서 두 학교는 남녀 부문에서 승리를 나누어 가졌다.

두 대학이 세계 最古이자 最高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8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으며 하나의 대학으로 치면 영국은 물론 세계적 지도자와 지성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두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튜토리얼 수업을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두 대학을 통틀어 '옥스브리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 대학도시에 들어서면 중세기의 중후한 고딕식 건물이 높은 뾰족탑과 함께 곳곳에 우뚝우뚝 서 있다. 각 칼리지들이다. 주로 한글 자모 미음 (ㅁ)자 모양의 이 건물에는 2평 남짓한 조그마한 방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한 학생에게 방 하나가 주어지는 기숙사이다. 교수와 학생이 한 건물 안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학문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 튜토리얼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 대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명확한 학풍의 차이가 있다. 옥스퍼드가 전통적으로 인문과학, 특히 PPE(정치, 철학, 경제학)분야에 강하다면 케임브리지는 자연과학, 수학, 의학 분야에서 보다 명성을 떨치고 있다. 영국병을 치유, 유명해진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를 비롯하여 맥밀런, 윌슨, 토니 블레어, 보리스 존슨, 리시 수낵 등 영국 총리 중 30명 이상이 옥스퍼드 출신, 빌 클린턴(전 미국 대통령), 간디(전 인도 총리) 등 정치가들과 시인 셸리, 아놀드 토인비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옥스퍼드 출신인데 비해 케임브리지가 뉴턴, 다윈 등 과학자와 케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을 배출한 사실은 두 대학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시인 워즈워스나 철학자 러셀도 배출한 케임브리지는 노벨상 수상자만 120명, 자연과학 분야에서 압도적인 업적을 자랑한다.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하버드지만 그 다음 2, 3위권은 옥스브리지가 차지한다. 의회나 내각에서의 비중도 절대적이다. 1960년대에는 보수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1980년대 대처정부의 장관 22명 중 17명이 이 대학 출신이었을 정도. 현재 노동당 정부에서는 많이 줄어서 20% 안팎에 머문다. 고위 법관도 4분의 3이다.

그러나 두 대학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교육 방식의 효용성과 세습적 계급의식 및 폐쇄성이 도마에 오른다. 튜토리얼 제도가 현대 AI 및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대규모 팀 단위 융합 프로젝트, 빠른 기술 적응력을 익히기에는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이라는 것. 그 보다 더 큰 비판은 두 대학의 배타적 문화이다. 부유층 특권을 세습하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 졸업 후까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곳 출신들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것. 그들은 출신 성분은 물론 쓰는 말의 어휘나 악센트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서민층과 사귀기 힘들고 융화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010년 초연되어 지금까지 16년째 공연(듀크 오브 요크 극장)되고 있는 연극 '퍼쉬'(극작가 로라 웨이드(Laura Wade))와 2014년 영화 '라이엇 클럽'은 비판의 불에 기름을 부었다. 퍼쉬(Push)는 '상류층, 귀족, 고급스러움'을 의미하고 라이엇(Riot)은 '폭동'의 뜻 아닌가. 옥스퍼드대학에 실존하는 최상류층 비밀 조직, 벌링던 클럽의 추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780년 이튼 칼리지 등 명문 출신들로만 구성된 이 클럽은 크리켓과 승마, 사냥이란 당초 설립취지에서 변질, 스포츠는 뒷전으로 밀리고 최근에는 끼리끼리의 방탕한 비밀 사교 파티 위주가 되었다.

이야기는 클럽회원 10명이 시골의 한 호프집(펍)을 빌려 호화판 디너파티를 벌이는 데서 시작, 분위기가 익어가자 술과 마약에 취해가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서민층에 대한 적개심과 선민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스토리. 걷잡을 수 없이 방탕해지는 분위기를 제지하는 펍 주인을 집단 폭행,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급기야는 주인의 딸에 대한 성적 희롱을 넘어 출장 성매매 여성까지 부르며 선을 넘기 시작,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들은 후배 한 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권력을 지닌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무마하는 것으로 끝.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최상류층은 처벌에서도 자유로워진다'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 데이비드 캐머런,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등도 클럽 회원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800년 역사의 엘리트 배출 雙壁…보트경주 유명 특권 세습에 배타적 계급의식 강해 서민들 눈총

초등교육 의무화는 이승만 '神의 한수'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⑭



좌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이승만의 평등한 경제를 위한 노력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막고 경제를 균평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대의 비극인 6·25 전란 등으로 온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전 국민에게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여 미국보다도 앞선 민주주의(미국은 1964년에야 차별 없는 흑인 선거권보장)를 실현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란을 미국 등 우방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하여 막아내고 어렵게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북한의 재침을 막아낸 우리 반공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균평한 경제를 위해 세계 최빈국임에도 초등교육 의무화(제헌헌법, 16조)와 교육투자 확대로 교육권을 향상하여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였다. 6·25 전란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경자유전(제헌헌법, 86조)의 실현으로 농민의 경작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지주의 농업자본을 산업자본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북한의 공산주의식 집단농장(무상몰수 집단경작)이 아닌 자본주의 사유재산권 제도(제헌헌법, 15조)하에 시장 경제원리에 부합되게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으로, 지주에게는 토지채권으로 보상하고 여력이 적은 농민들은 토지 대금을 1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농지개혁은 균평한 경제 실현 노력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놀라운 개혁이었다. 물론 유상으로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이를 통해 농지 자본을 산업자본화하려던 계획이 6·25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로 토지채권가격이 폭락하여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음은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민간 상공업자본축적의 어려움도 영향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당시 제1공화국의 상공업 육성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제헌헌법이 사기업근로자의 이익균점권(18조: 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폐지), 기간산업 국영화와 국가의 무역통제(87조; 54년 3차 개헌시 폐지) 등 준 사회주의적 조항들(당시 제헌의원들의 사회주의 이념 반영)과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식'경제계획'방식에 대한 비호감 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노력은 미흡하였다.



사진은 서울 금호초등학교 1963년 입학식이다. 운동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로 들어찼다. 〈연합뉴스 제공〉

수준 높은 인적자원 밑바탕 구축
박정희 '새마을운동' 실현 이끌어

대한민국 건국 사상: 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기업경제 사상의 결합

결국 이승만 시대가 남긴 미완의 균평한 경제 이상은 박정희의 기업경제 사상으로 무장한 산업화계획의 추진과 스스로 돕는 국민을 돕는 새마을운동으로 실현되었다. 차회에 상술하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마저도 각 마을이 새마을지도자를 사장으로 하는 기업처럼 운영되도록 유도하여 성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유시장이 공급하는 넓은 운동장에서 자유기업과 새마을이 정부와 정치가 제공하는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 규칙하에 너도나도 최고의 수출실적과 마을 성과를 향해 내달려 경쟁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 실현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사상과 박정희의 자본주의 기업경제 사상및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력이 함께 모여 모두 잘 사는 보다 균평한 동반성장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셈이다. 이 사상을 일컬어 한국의 건국 사상이라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는가?

유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끝없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혁명적 발상의 연속이었다. 헌법을 중단시킨 5·16은 물론, 3선개헌을 통한 1971년 4월의 3선 대통령취임이나 1972년 10월 17일 유신으로 거의 종신 대통령의 길을 만든 유신헌법도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소위 서구식 절차적 민주주의에서의 일탈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물론 본인 또한 이를 인지했기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맹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큰 서양 사람들에 맞는 옷은 그냥 입을 수가 없으니 품도 줄이고 바지도 줄여 입어야 하는 것처럼 서구식 민주주의도 나라 사정에 맞춰 고쳐 써야하지 민주주의를 기성복처럼 한 치수에 맞출 수 없다고 설득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를 마치 번영을 가져오는 신주처럼 받드는 행태가 필자와 같은 범인들의 눈에는 독재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실천 여부에 대한 논쟁을 떠나, 민주주의 제도도 여느 정치·경제 제도나 다름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선택하거나 변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앞에서 보여준 대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증거를 놓고 볼 때 민주주의를 보다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기되는 질문은 박정희는 왜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신이라는 본인도 인정하는 형식적 일탈을 감행하였을까? 사후에 측근들이 안타까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그럼, 당신이 하겠다고 내건 민족중흥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제대로 성취하였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점을 규명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이상론에 빠진 범인들이 생각하듯 그의 연속된 일탈이 단순히 평생 독재를 위해서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 형태와 실제 작동 방식과 성과는 (오늘날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체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 또한 다양하다는 사실이 실증하듯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을 떠나 그 내용과 이룬 성과를 구명하지 않고는 박정희 정치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9·28 서울 수복’ 어찌 잊으랴

‘自由의 보름달’ 한가위 휘영청



유한준
본회 부회장
시인·수필가

효심의 귀성행렬 이어지는 명절

한증막의 극한 폭염이 물러가고 중추가절이 성큼 다가온다. 이달 9월엔 우리 민족의 2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과 함께 ‘9·28서울수복’ 76주년을 맞는다. ‘추석’은 가족의 소중함과 효심을 일깨워주는 날이고, ‘9·28’은 1950년 6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불법 남침한 6·25전쟁의 전세(戰勢)를 바꾼 날이다.

올해는 추석(25일)에 이어 ‘9·28’이 이어진다. 올여름은 폭염, 가뭄, 폭우가 교차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 3일 중에 거제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은 최대 누적 900㎜의 폭우로 침수·단전·단수·산사태 피해가 잇따랐다. 그래도 추석 귀성행렬은 여전하고, 추원보본(追遠報本) 전통도 변함없이 계승될 것이다.

추석 명절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 차례(茶禮)를 지낸다. 추석 제사용 차례주를 백주(白酒)라고 한다.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각종 민속놀이를 즐겼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온갖 놀이로 즐기는 추석 명절의 세시풍속도 날로 퇴화되는 느낌이 짙어진다.

추석 명절의 대표적 민속놀이로는 윷놀이·강강술래·달맞이·줄다리기·씨름·활쏘기 등이 있다. 이런 세시풍속을 함께 즐기면서 마을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므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이라는 말이 생겼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부녀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을 하고, 그 성적을 가려 진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회소곡(會蘇曲)」을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를 가배(嘉俳)라 하며, 추석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추석 명절의 풍속도는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정담을 나누는 것인데, 오늘날엔 빵, 피자 등 택배나, 외식으로 바뀌어 간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명절의 중심은 역시 가족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의 사랑과 책임, 조상의 음덕을 되새기는 명절, 초가지붕 위로 떠오르는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던 옛 정서와, 아파트 창가에서 바라보는 보름달의 감흥이 다르다 해도, 달을 보며 계절의 변화,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는 마음은 변할 수 없음이 인지상정이다.

‘9·28 서울수복’의 교훈은 국론통일

9·28서울수복은 6·25전쟁 중에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되찾기 위해 ‘제2차 서울전투(Second Battle of Seoul)’라는 작전명 아래 1950년 9월 15일 실시된 ‘인천상륙작전’ 성공이후 9월 28일까지 치른 전투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로 진격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 국가의 존엄을 되찾고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명령으로 38선을 돌파하는 드라마를 엮어냈다.

서울수복의 교훈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했다는 상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 주었다. 전쟁의 참화와 전흔(戰痕)을 딛고 일어나, 산업입국 기치아래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글로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기를 구축했다.

국군 전사자·부상자·실종자, 유엔군 사망자, 민간인 피해규모, 산업시설 파괴, 국토의 황폐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9·28서울수복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한국갤럽의 현 정부 7개 분야 정책 평가에서 ‘대북정책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낮았고, 부동산정책은 26%로 대북정책에 이어 최하위권이었다. 안보는 정책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안보는 생존의 현실이고,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국가 최우선의 덕목이며, 국민이 느끼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다.

북한은 우리를 적대국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포용정책을 편다는 지적이 많다. 과연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는 국가의 명운이자 국민 생명권의 보호이다. 6·25전쟁은 휴전으로 총성은 멎었으나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최근 북한 동향은 러시아와 군사협력 심화, 중국과의 교역·동맹 현대화, 대남 정찰·정보능력 강화, 적대적 두 국가기조 고착화로 요약된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교역 상대국이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사실이다. 더불어 러시아의 위성기술, 중국의 해외 정보망을 활용해 약점을 보완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의 우리 현실은 정치적 일방통행, 국민적 갈등, 사회적 분열양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남북이 대적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겐 국론통일과 대동화합이 필수 과제이며, 9·28서울수복의 교훈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2010년 9월28일 오전 열린 6·25전쟁 60년 서울수복 기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서울 수복 당시 참전부대 소대장과 소대원 이었던 이서근(오른쪽에서 두번째), 강동구(오른쪽)씨가 게양되는 태극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한민국 ‘국권 회복 상징의 날’ 잊지말아야
휴전으로 총성 멎었어도 아직도 진행형 명심

中2 손자와 중국 베이징에 가다



중2 손자 이두원(오른쪽)과 만리장성에서 추억의 한 장.

만리장성 인산인해 百忍 시험

하루 입장 65000명 제한 ㄹ자 장사진 땡볕 땀 줄줄 보안검사 시시콜콜 엄격 VPN등 '빅 브라더' 실감

중학교 2학년 손자와 지난 7월 1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을 다녀왔다. 지난해까지 해외여행 함께 가자면 손사래 쳤는데, 선뜻 가겠다고 해 서둘러 일정을 잡았다. 기말시험 끝나고 여름방학을 앞 둔 시기라 무더위와 장마가 겹친다. 엄마 아빠 따라나서기도 꺼리는 사춘기에 할아버지와 동행하겠다니 기특하고 고맙다.

베이징을 선택한 건 손자 초등학생 때 한자 기초를 가르쳐 7급 자격증을 땄기에 한자 간판을 보면 학습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예상대로 눈에 익은 한자를 보면 무슨 자(字)냐고 묻는다. 베이징은 중국 5,000년 역사의 집약적 공간이다. 만리장성, 자금성, 천안문, 이화원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역사와 문화유적이 한 도시에 몰려 있다. 황제의 도시에서 공산혁명의 수도로, 현대 경제대국의 심장인 베이징에서 손자가 소소한 느낌이라도 받게 하고 싶었다.

18년 전 아내와 베이징에 처음 들렀을 땐 느슨했는데, 패키지여행도 녹록지 않게 빡빡해졌다. 예전엔 여행사에 경비와 여권만 주면 비자 신청은 물론, 입국 수속 절차를 대행해 줬다. 이젠 공항에서도 자동화기기를 통해 수화물 위탁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비행기 좌석도 48시간 전 본인이 항공사에 접속하여 지정하란다. 결국 며느리가 출국은 물론, 입국 48시간 전에 맞춰 좌석을 지정해 휴대폰으로 보내왔다.

중국은 30일 간 무비자 체류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입국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공항서 모바일에 저장한 QR코드를 찍으니 입국 수속은 편리하고 빨라졌다. 중국 여행 때 가상사설망(VPN)은 필수. 한국에서 VPN 앱을 설치하고 결제까지 마쳐야 한다. 입국 후 앱을 다운받거나 결제하기는 어렵다. VPN이 없으면 유튜브, 구글지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차단하여 사용할 수 없다. 통신사 로밍으로 해결했다. 요즘 베이징 쇼핑센터는 물론 관광지 매점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고, 모바일 결제(QR코드)를 한다. 중국의 모든 결제에 사용되는 알리페이(Alipay)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와 연계시켜 놓아야 물품 사기가 편하다.

중국여행 때 가장 불편한 건 줄서기다. 베이징에서 가까운 바다링(八達嶺)장성은 보존 상태와 접근성이 좋아 국내외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 만리장성 턱밑까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다. 성수기엔 하루 7만~8만 명까지 몰리자 입장 인원을 하루 6만 5천명으로 제한했다. ㄹ자로 꺾이는 대기 줄이 끝없이 이어져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바다링 망루 오르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인파가 몰려 걷기조차 불편하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로 사진 찍기도 어렵다. 만리장성은 구불구불한 능선을 타고 용틀임하는 용이 아득한 구름너머로 사라지는 형상이다.

줄서기 고통이 극심한 곳은 천안문 광장 입장 때. 그날 베이징의 온도는 섭씨 36도. 그늘막도 없는 뙤약볕 아래 40여 분 기다리니 지치고 힘들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손자가 더위라도 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 보안검사는 공항보다 엄격해 좀처럼 대기 줄이 줄지 않는다. 여권확인은 기본, 모자 속까지 뒤집어 본다. 휴대용 가방은 검색대를 통과했어도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한다. 가방에 챙겨넣은 일정표를 보더니 무슨 문서냐고 가이드에게 확인한다.



만리장성의 케이블카 타는 대기 줄이 ㄹ자형으로 길게 이어졌다. 뙤약볕 아래 1시간 넘게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규섭 제공〉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린 천안문을 거쳐 자금성에 입장할 때도 여권과 가방 검사는 마찬가지다. 자금성은 2021년부터 일주일 전 인터넷으로 실명 예약해야하고 관람 인원도 제한한다. 자금성은 명·청시대 24명의 황제가 머물던 궁궐로 공식 명칭은 고궁박물원(古宮博物院). 남쪽 오문으로 입장해 북쪽 신무문으로 나가는 일방통행. 땀에 흠뻑젖어 태화전과 건청궁 등 주요 건물만 건성건성 둘러봤다.

청나라 황실정원 이화원도 인파로 붐비기는 마찬가지. 서태후가 정무를 보던 인수전과 그의 침전인 낙수당은 발디딜 틈이 없다. 273칸 목조회랑(長廊)의 그림만 여유롭다. 거대한 인공호수에 유람선을 타고 불황각 등 주변 경관을 둘러본다. 뱃머리를 스쳐가는 미풍도 서늘해 고맙다. 배에서 내려 석조아치교인 '십칠공교'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은빛 거대한 새둥지 모형의 올림픽 주경기장은 올림픽 테마박물관으로 변했다. 하계(2008년)와 동계(2022년) '쌍 올림픽' 기록물을 역동적으로 전시해 놓았다. 눈길을 끄는 건 옥을 박은 올림픽 메달. 금·은·동메달 앞면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새겨놓았다. 뒷면에 옥으로 바탕을 깔고 올림픽 엠블럼을 새겼다. 옥은 중국 문화에서 고귀함과 미덕을 상징한다.

손자는 눈으로 보는 문화유적보다 체험 공간이 있는 '올림픽박물관'을 신명나게 누빈다. 1층에 시뮬레이션 스키, 컬링, 농구 볼 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춰 놓았다. 공기 부력에 공 세 개가 차례로 뜨는 기구의 페달을 열심히 밟는다. 손자가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길 위에서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규섭 (본회 회우·전 사무총장)

20th Asian Games
Aichi-Nagoya 2026

한국, 종합 2위 탈환 절치부심

200개 이상 메달 획득 벌떼 총력

아이치(愛知)-나고야(名古屋)가 부른다.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다. 오는 9월 19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일수 기준) 갈고닦은 솜씨를 한껏 뽐낼 스포츠 대축제다. '이메이진 원 아시아(Imagine One Asia)'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꿈의 무대로서, 아시아인의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소망이 담긴 경연장이다. 그에 어울리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1만 5,000여 명이 43개 종목(71개 세부 종목)에서 469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을 펼친다. 2022 항저우(杭州) 대회에 견줘 3개 종목 10개 세부 종목이 늘어났다. 그러나 금메달 수는 오히려 12개 줄었다.

일본으로서는 세 번째 맞이하는 아시안 게임이다. 1958 도쿄(東京) 대회와 1994 히로시마(廣島) 대회를 이미 치른 바 있어 32년 만에 벌어지는 열전의 마당이다. 그만큼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은 일본이 전통 3강으로 꼽히는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어떤 전과를 올릴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개최 중간 연도에 열리는 특성상 아시아 스포츠계의 세대교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41개 종목 1,000여 명의 선수단(단장 이상현 대한체육회 부회장·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을 파견한다. 원년 대회(1951 뉴델리)를 빼고 계속 출전해 온 한국으로서는 이번 대회가 열아홉 번째 아시안 게임이다.

목표는 '종합 2위 탈환'과 '200개 이상 메달 획득'. 그러나 일본의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여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두 대회(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에서, 한국은 일본에 추월당해 2위를 내줬다. 1998 방콕 대회부터 2014 인천 대회까지 이룬 5연속 2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3위로 내려앉았다.(표 참조)

'개최국 전례'도 예측에 그늘을 드리우는 요소다. 한국은 1986 서울 대회에서 비로소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당시, 최강 중국에 불과 금메달 한 개 차(93-94)로 종합 우승의 영광을 놓쳤을 만큼 위세를 과시했다. 그 기세를 몰아 1990 베이징(北京) 대회에서도 2위에 올랐으나, 1994 히로시마 대회 때 개최국 일본에 그 자리를 내줘야 했다.

한국이 일본과의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까. 금메달 수에서 2018 대회 때 일본에 26개(49-75) 뒤졌던 한국은 2022 대회 때는 10개(42-52) 차로 그 간극을 좁힌 바 있다. 총 메달 수에선 이미 역전을 이뤘다. 2018 대회 때 28개 열세(177-205)였으나, 2022 대회 때는 2개 앞섰다(190-188). 따라서 한국이 200개 이상 메달을 따낼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물론 2위 탈환을 이룬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목표 달성 노력의 선봉엔 양궁, 펜싱, 태권도, 수영, 사격이 선다. 특히 양궁은 한국의 전통적 '효자 종목'이다.

1978 방콕 대회 때 처음 도입된 이래 한국은 초강세를 보였다. 2022 대회까지 70개 금메달 중 46개, 약 3분의 2(65.7%)를 휩쓸며 '양궁=한국'의 등식을 창출한 바 있다. 펜싱도 버금가는 위세를 떨쳤다. 1974 테헤란 대회 때 선보인 펜싱에서 총 금메달 수 1위를 기록, 중국을 제치고(52-49) 1위에 굳게 올라 있다.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그려 갈 금맥 지도도 눈부실 게 분명하다. 김우진(양궁), 오상욱(펜싱), 안세영(배드민턴), 황선우·김우민·김영범(이상 수영), 우상혁·나마디 조엘진(이상 육상), 신유빈(탁구), 이도현·서채현(이상 스포츠 클라이밍), 전웅태(근대5종) 등이 어떤 메달 전선을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한국의 인기 스포츠인 야구(5회)와 남자 축구(4회)는 각각 연속 우승의 금자탑에 도전한다.

최규섭 ㈜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양궁 펜싱 태권도 등 애국가 효자



8월2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 제공〉

개최국 '나고야 텃세' 극복이 열쇠

“한국 미래를 선거 부정으로 더럽히지 마시오”



유자효
본회 이사·시인

“주여, 때가 됐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 들녘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명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날들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감미로움이 스미게 하소서.”

-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가을날〉



젊은이들 함성 고맙고 미안하다

밤에 자다가 추워서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바로 어제까지 더워서 잠을 설치게 하더니, 시간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물러설 것 같지 않던 폭염. 북반구를 들끓게 했던 무더위의 대군단이 물러가고 있다. 에어컨을 모르던 프랑스와 독일에서 많은 열사병 사망자가 나오자, 그동안의 무분별한 탄소 배출이 살인적 폭염의 한 원인이었다는 반성론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 관측 이후 최고의 무더위와 가뭄 뒤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의 원인이 탄소 배출의 증가에 있다는 것이 합의된 이론도 아니다. 인류는 탄소 배출을 줄여 재앙을 막아보려 파리 기후협약을 만들었지만,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이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탄소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파리협약에서 탈퇴해버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탄소 배출에 반대하는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과 시위에 대해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짐짓 폄훼하는 반응을 보였다. 빅2의 이런 반응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지구의 환경 오염은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마는 것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돼 5년째로 접어든 유럽 전쟁과, 이란과 미국의 중동 전쟁을 보면 이런 환경 논쟁은 한가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전쟁은 인류 문명의 종말을 보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양강에 올랐고, 현대차는 전기차 전환에서 살아남아 유럽을 제쳤다. 방위산업의 경쟁력도 가격과 생산 속도 양면에서 막강하다. 북핵이라는 안보상의 위협이 강한 방위산업을 낳았으니 인과율은 여기에도 작용하는 것인가? 4만 달러를 내다보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앞섰다. 한국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배우고 싶은 외국어로 한국어가 꼽혔다. 그 이유가 BTS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라니 K팝의 위세를 알겠다. 그러나 내면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다.

삼성 SK 반도체 지구촌 호령
防産도 쑥쑥 세계 곳곳 수호
K컬처 위세 한국어 열풍 후끈
쭉쭉 뻗는 대한민국 파워 실감
선거공정 훼손 땐 國格 급추락

광복절에도 올림픽공원에서는 아침부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많은 젊은이가 텐트에서 밤을 지새고, 줄서서 식사를 하고 시위를 했다.

주최 측도 없는 자발적인 시위가 야외 활동이 힘들었던 지난 여름 폭염을 뚫고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또한 푸드 트럭을 제공하거나 음료수 등을 공급하는 이름 없는 지원 세력들의 도움도 처음 보는 현상이다.

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오래되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선거 때마다 갖가지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선거에 문제를 제기하면 극우라고 몰아붙였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의문들이 제기돼도 제도는 고쳐지지 않고, 선관위에서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한국에서는 선거에 거대한 배경과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더 가까운 한국은 무관할까? 올림픽공원에 모여 떠들든 말든 모르는 체 먼 산 쳐다보며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당 대표 선출에 열을 올리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선거의 공정성이야말로 민주 국가에서는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문제인데 어쩌면 이렇게 한가할 수 있는가? 선관위 직원 몇 명의 문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가 살 미래를 환경 오염으로 더럽히지 말아 달라는 툰베리의 절규와 우리가 살 미래를 선거 부정으로 더럽히지 말아 달라는 올림픽공원에서의 한국 청년들의 절규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젊은이들이 고맙고 미안하다.

다시 가을이다. 이 가을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는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지난 여름 세계적인 폭염 현상이 일깨워 주었다. 선거 문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조국의 존망이 걸려 있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현실이다. 비극적인 사태가 돌발하기 전에 이런 문제의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선거야!

“가을에는/기도하게 하소서/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가을에는/사랑하게 하소서/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나의 영혼/굽이치는 바다와/백합의 골짜기를 지나/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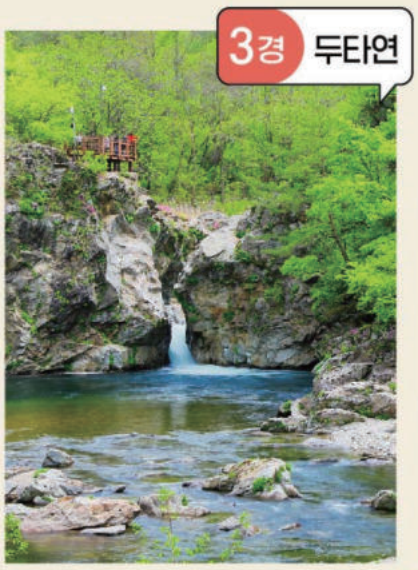
- 김현승「가을의 기도」

청춘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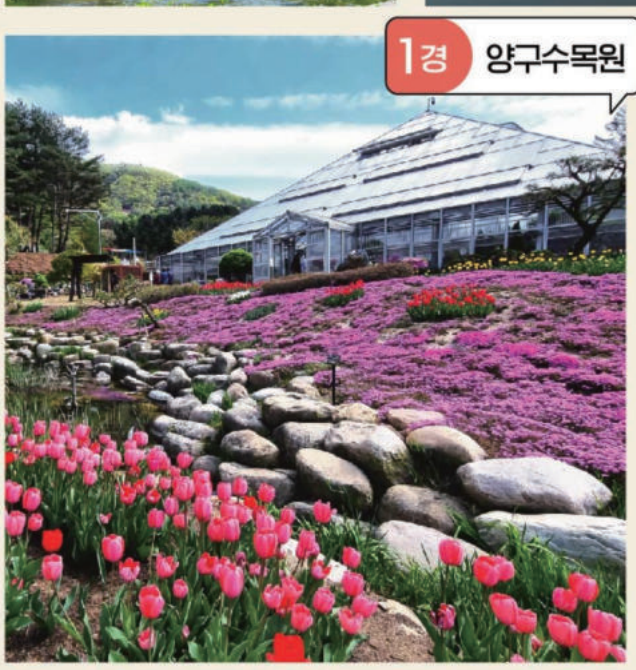
양구9경 구경갈시간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지니더—

www.ygtour.kr

유토피아 잠깐 AI 디스토피아 임박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역사연구가



8월 18일 서울대에서 열린 로보틱스 국가연구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휴머노이드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가 최근 읽은 책은 'AI, 신의 탄생-인간의 종말'이다. 이 책은 AI 전문가인 엘리에저 유드코스키와 네이트 소아레스 두 사람의 공저다. 이 책을 통해 두 사람은 초지능(超知能) AI의 출현 이후 벌어질 일로서 가장 먼저 인류 전체의 멸종 가능성을 들었다.

그리고 초지능 AI의 출현 가능성도 50~100년 뒤가 아니라 5~10년 뒤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는 AI의 진화 속도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초고속으로 진화함을 전망한 것이다.

지난 5월 25일 로마교황 레오14세가 즉위 후 처음 발표한 회칙(回勅)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무장해제(disarm) 함으로써 더 개방적이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장해제는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번 회칙에서 "AI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AI에 관한 윤리적 틀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회 정의의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을 주장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이미 우리가 깊이 잠겨 살아가는 하나의 환경이자, 우리가 반드시 상대해야 하는 힘이 됐다"며 "견고한 법적 틀과 독립적 감시, 정보에 밝은 사용자,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현생인류의 역사는 대체로 20만 년으로 보고 있다.

인류가 이제는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고, 기선을 만들어 온 천하의 바다를 누빈다. 잠수함을 만들어 바닷속도 달린다. 우주로켓을 만들어 지구를 벗어나 달에도 가고 태양계를 벗어나 더 먼 우주로 향한다.

20세기에 들어선 인간의 지능은 진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어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유사인간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 유사인간이 바로 AI이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로봇이란 형태로 세상에 나왔다.

마라톤 하는 로봇은 이제 인간의 속도를 추월했다. 인조인간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조인간은 이제 바둑에서도 인간의 고수를 패배시키고, 탁구에서도 인간을 이겼다.

급기야는 AI가 그림을 그리고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을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신춘문예 응모작 가운데는 AI의 창작품도 대폭 늘었으리라는 분석이다.

AI의 발달은 마침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데에 이르렀다. SF-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오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위협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인간 조교(助教)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대학 조교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이 이제는 스스로 진화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마침내는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AI의 초고속 진화가 마침내 핵전쟁과 더불어 인류 멸망의 가장 시급한 원인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전기코드 뽑아도 끄떡없어 인류통제 벗어나
인간이 벌인 自業自得…해결할 묘책 안보여

그러나 핵전쟁은 터지면 적도 아군도 모두 멸망한다는 마지막 지렛대라도 있지만 AI의 초고속 진화에는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다.

전문가들은 AI가 인류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시기를 50~100년 이후로 추측하는데, 일부 전문가가 추측하기에는 늦어도 10년, 빠르면 5년 뒤에 닥칠 것으로 본다. 나도 마찬가지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AI의 진화속도가 인간의 진화속도에 비하면 참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초고속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스스로 진화를 재촉하니 그 속도를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당장 지난 연초 AI에게 핵무기 통제권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검토해 봤더니 발사 스위치를 누를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해답이 나왔다. 이제 인류의 운명, 지구의 멸망 여부도 인간이 만든 AI에 달렸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나는 전혀 없다고 본다. 내가 비관론자라서가 아니다. 낙관론이 들어설 자리도 없이 인류의 멸망은 지구의 천수(天壽) 30억 년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젠 AI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창조자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말릴 길이 없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멈추면 될 게 아닌가 하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인간이 만든 모든 활동하는 기계는 연료를 필요로 한다. 비행기·기차·기선·자동차·우주선 등 모두 전기든 화석연료든 액체연료든 추진체가 필요하다. 만화나 영화 SF소설처럼 인조인간의 연료가 되는 전기코드를 뽑아버리면 되지 않으냐고 하겠지만 인공지능의 초고속 진화 능력으로 추측하면 그 해결책도 분명히 빠른 시일에 찾아낼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적은 분량으로 가장 크고 오랜 기간을 갈 수 있는 물질이 현재까지는 핵연료다. 핵물질 1kg이면 인공지능이 천년은 버틸 수 있고, 인류와 지구는 그보다 훨씬 앞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인류가 자각하고 자성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춘다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겠지만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문제다.

그리고 더 일찍 멸망하는 것을 멈춘다고 해도 어차피 지구의 수명은 30억년이다.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생물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30억 년 뒤에는 지구가 수명을 다해 태양계에서 사라진다. 또한 태양계도 수명이 있어 100억 년 뒤에는 이 우주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우주의 시간표다.

나는 생각한다. 140억 년 전의 빅뱅으로 지금 우주가 생겨났는데,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빅뱅과 또 다른 우주가 있지 않았을까. 또 나는 생각한다. 이번 우주가 천수를 다하고 축소든 폭발이든 최후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나 또 다른 우주가 생겨나고, 그 우주에 속한 어떤 우주, 어떤 태양계에 속한 어떤 행성, 또 새로운 지구가 생겨나고 또 다른 생명체가 생겨나고, 인간으로 진화하여 번성하다가 또 다시 멸망하는 무한대의 역사를 이어가지는 않을까.

어쨌거나 지금 당장 인류의 운명 앞에 낙관론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모든 국가의 멸망 원인과 같이 인류의 멸절 역시 어리석은 인간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결과로 볼 수밖에는 없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祕史 ⑥

“必死卽生으로 處變不驚 혼내리라”



김동철
본회 이사
이순신인성리더십포럼 대표



6. 안보위기 속 이순신 초극 리더십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다.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덥지 못해서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에서 “모택동(毛澤東·마오쩌둥)의 좌우명인 ‘처변불경(處變不驚)’이 곧 자신의 좌우명이다”라고 말했다. 처변불경은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택동이 누구인가?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움) 기치를 내걸고 중공군 100여만 명을 참전시켜 한반도 통일을 방해했던 적장이다. 안 장관이 말한 ‘처변불경’은 자신의 탈영 의혹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빗발치는 공세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리를 보존하겠다는 자기 최면의 자위적 발언인 것만 같다.

피아를 전도시키는 안보관 때문인지 군 내부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인 맥아더 장군이 남긴 명언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발한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할 사항이다. 안 장관은 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와중에 국군과 주한미군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도청하거나 대외비 정보를 빼돌리는 등 스파이 활동을 한 중국인민군 출신 2명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안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 누가 방위병 출신 안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국방개혁과제를 맡겨 놓았는가?

망전필위(忘戰必危)!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이 말은 임진-정유 7년 전쟁을 겪었던 ‘전시 재상’ 서애 류성룡이 ‘징비록(懲毖錄)’에서 밝힌 경고이자 절규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류성룡은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당한 뒤 고향 안동에 내려와 ‘징비록’을 피와 눈물로써 집필했다.

예기징이비후환(預其懲而毖後患)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하고
지행병진(知行竝進) 알면 행하여야 하며
즉 유비무환(卽有備無患) 그것이 곧 유비무환이다

이 유비무환 정신은 곧 이순신 장군의 선공후사(先公後私), 임전무퇴(臨戰無退), 필사즉생(必死則生) 및 살신성인(殺身成仁) 같은 초극(超克) 정신으로 발현되었다. 류성룡은 한양 건천동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이순신의 장재(將才)를 일찍 알아봤고 난세에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멘토-멘티 인연을 이어갔다.

정보 수집에 일가견…23전 23승 대업
忘戰必危인데 ‘안보불감증’ 다시 점검

군인의 본분은 위국헌신하는 것이다. 이 유비무환의 징비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그의 23전 23승, 불멸의 전승무패 기록의 요체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이다. 먼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전략이다. 전투의 시기와 장소, 즉 주동권을 선점하고 정(正 정공법)과 기(奇 기습) 또는 기정병용의 병법을 활용한 그의 전략은 소통의 현장인 한산도 운주당(현 제승당)에서 나왔다.

“군사에 관한 한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하라.”

이순신 장군은 불치하문(不恥下問),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승전의 토대가 되었다. 한산도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3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서 상하좌우 소통을 통해서 탁월한 전략과 작전이 수립되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때 13대 133의 절대 열세인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요령을 피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1천명의 군사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인 울돌목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해 천신만고 끝에 적을 물리친 것은 창의적인 전술 덕택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주특기는 탐망이었다. 여러 탐망꾼과 탐망선을 활용했고, 피란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정을 손바닥 보듯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조선 최초의 정보경영 지휘관인 CIO(Chief of Information Officer)였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전략은 유효했다. 그런데 부지피지기 일승일부(不知彼知己 一勝一負),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 한번은 이기고 한번은 진다. 승률 50%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상대를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위태롭다.

호모이성(好謨而成)은 이순신 장군 리더십의 한 형태였다. 수집된 수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전시 작전 플랜 1, 2, 3을 마련하고 상황에 맞게 실전에 응용하는 계책은 잇단 불멸의 기록을 낳았다. 여기에는 고려말 최무선 장군의 화약 발명 이후 조선이 개발한 판옥선과 총통이 한몫했다.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은 바닥이 평편한 평저선인 판옥선에서 방포하면 배가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았다. 이 총통은 거북선과 함께 16세기 동북아 삼국(명·일·조선)에서 조선 수군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게임 체인저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군사 현대화 노력을 통해서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세계적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 천무는 5개국이다. 천궁-Ⅱ는 중동 3개국에 수출되었고, FA-50은 6개국이 도입했다.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운용하고 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첨단 구축함은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아무리 세상이 평화롭다고 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안보불감증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다.

춘장 고동색에 기름 잘잘
젓가락으로 쓱쓱싹싹 비벼
남녀노소 모두 냠냠 엄지척

자장면 시키신 분~



맛 순례 ⑧



이병대
본회 고문
전 동아일보·KBS기자
본회 20, 21대 회장

그동안 한식 얘기만 했으니 이번에는 중화식 자장면으로 분위기를 바꿔본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자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배달시키는 음식이 자장면이고 농촌의 논밭에서도 일하다가 새참으로 시켜 먹는 음식이 자장면인 세상이다. 자장면의 '자(炸 zha)'는 '기름에 튀기듯이 볶는다'는 뜻이고 '장(醬 jiang)'은 '중국된장(春醬)'을, 그리고 '면(面,麵 mian)'은 '국수'를 뜻한다. 중국된장인 춘장을 기름에 튀기듯 볶아 국수에 버무려 먹는 음식이 자장면인 것이다.

중국 식단의 명칭은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그대로 표현한다. 자장면과 같이 잘 먹는 탕수육의 경우 '탕(糖 tang)'은 '달다, 달달하다'는 뜻이고 '수(醋 ci)'는 '시다, 새콤하다', 그리고 '육(肉 rou)'은 돼지고기를 뜻한다. 즉 달고 새콤한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요리를 뜻한다. 중국 사람들에게 육(肉)은 돼지고기를 뜻하며 쇠고기는 반드시 우육(牛肉)이라 표기한다. 명(明)나라 이전까지 돼지고기는 중국 저소득층에서도 거의 먹지 않은 기피 육류였다. 고기의 주류는 양(羊)고기였는데 때문에 한자에서 양(羊)을 넣어 만든 글자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아름다울 미(美)'자도 양(羊)과 크다(大)를 합친 글자인데 잡아먹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크고 살찐 양이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이다.

송나라때 소동파(蘇東坡)가 황주(黃州)에 유배 갔을 때 주민들이 돼지 고기를 기피 하는 것을 보고 개발한 요리가 동파육이다. 명나라를 건국하기 전 주원장(朱元璋)은 거지 생활을 하면서 남이 먹지 않은 돼지고기에 맛을 들여 개국 후 돼지고기를 적극 권장해 이후 고기(肉)하면 돼지고기가 중국의 국민 육류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먹는 자장면은 중국의 자장면과 맛이 다르다. 우리의 자장면 자장은 춘장에 카라멜 색소와 설탕 그리고 고기를 넣고 볶다가 물과 전분을 풀어 걸쭉하게 소스를 만든다. 반면 중국 자장면은 춘장에 고기를 넣고 볶다가 물과 전분을 넣지 않고 그대로 국수에 올려 먹는다. 따라서 우리 자장은 달콤하고 걸쭉한데 비해 중국 자장은 짜고 빡빡하다. 때문에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중국 자장면은 짜고 빡빡해서 아주 낯설다.

중국 산동지방 농촌음식에서 시작
淸나라때 인천에 들어와 전국 확산



인천 차이나 타운

중국에 갈 때면 향수가 있어 요리 뒤에 자장면을 시키는데 매번 실망하곤 한다.

원래 자장면은 중국 산동(山東)지방 농촌 음식이었다. 조리법이 간단해 농번기에 농민들이 좋아했다. 명나라 말 이자성(李自成)의 반란군에는 많은 산동사람들이 있었다. 이 반란군이 북경(北京)에 입성하면서 그들의 간편 식단인 자장면을 야전식단으로 애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북경 향토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자장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환란이 갖고 왔다는 점에서 중국 북경 케이스와 비슷하다. 자장면은 우리나라 근 현대사와 함께 한다. 조선조 말 1882년 7월 2일 이른바 구식 군대는 차별 대우를 받던 차에 밀린 봉급으로 받은 쌀에 돌과 겨가 많이 섞여 있자 흥분하여 민씨 세력가의 집을 공격하고 궁궐에 난입한다. 목숨에 위협을 느낀 민 왕비는 장호원의 민씨 일족의 집에 숨는다. 이 군란으로 대원군이 다시 등장한다. 민 왕비는 대원군을 견제하기 위해 김윤식(金允植) 등을 천진(天津)에 머물던 청나라 실력자 이홍장(李鴻章)에게 보내 '대원군이 난을 일으켜 왕비를 살해하려 하니 도와 달라'는 전갈을 보낸다.

이 홍장은 즉각 직속부대인 회군(淮軍)에 조선 파병을 지시한다. 지휘관 오장경(吳長慶)은 제독 정여창(丁汝昌)의 함선을 이용해 천진과 연태(烟台)에서 3천5백여 청군을 이끌고 김윤식과 함께 8월 20일 오후 경기도 남양만에 상륙한다. 당시 청군에는 23세의 원세개(袁世凱)라는 중간 장교를 포함해 상인 등 40여 명의 민간인도 있었다. 이 민간인들은 청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는 업자와 요리사, 양복사, 이발사 등 기능사들이었다. 이들 요리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자장면이 들어오게 되고 원세개와의 3대 1세기에 걸친 우리나라와의 인연이 맺어진다.

이때 강력한 인상을 이홍장에게 준 원세개는 2년 후 갑신정변을 청군에 유리하게 정리하면서 고속 출세를 해 1885년 조선 상주 청국 총리로 임명된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원세개의 세상이 된 것이다. 왕의 침전 앞까지 가마를 타고 가고 고종을 폐위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민 왕비는 원세개를 컨트롤하기 위해 한국 처녀에게 장가를 보내자는 꾀를 냈다. 고종이 직접 중매에 나섰는데 간택된 처녀가 인물 좋고 명석한 세도가 안동 김(金)씨 한 명문가의 16세 외동딸 월선(月仙)이었다.

김월선은 하녀 두 사람을 데리고 시집을 갔는데 원세개는 이미 본국에 본처와 1첩이 있었다. 원세개는 데리고 간 두 하녀를 모두 첩으로 삼아 김부인보다 1세 많은 이씨를 2번째 첩, 1세 적은 오씨를 4번째 첩, 그리고 김부인은 3번째 첩으로 삼는다. 김부인에게 천추의 한이 된 모욕이었다. 그러나 김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조선왕조를 살리고 친정을 보살피기 위해 원세개를 지극 정성으로 돌봤다.

김부인과 원세개는 3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3남2녀 모두 5남매를 낳았다.

원세개가 좋아한 음식은 자장면과 기스면(鷄絲面). 청군 요리사들은 우리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는 파티에 자장면과 기스면을 항상 내놓아 그때부터 우리나라 상층부 인사들이 자장면 맛을 알게 됐다고 한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퇴한 이후에도 이들 요리사와 청나라 상인들은 한국에 남아 사업을 하며 성장한다. 이들 가운데 우희광(于希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인천항에는 청나라 상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청나라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 겸 식당이 필요했다. 우희광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에 자장면의 시대가 열리게 된 계기다. (다음회에 계속).

걷기운동으로 '건강장수' 지킨다

하루 1시간이면 충분…심혈관 강화로 폐 다리 척추 등 튼튼



박종서
본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8,600명을 넘어 장수시대가 열렸다. 이 중 12%는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통 세상이 불덩어리로 변할 것 같이 덥더니 말복과 처서를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하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걷기 좋은 계절이다.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 운동화 신고 나서면 된다. 이 간단한 심혈관 운동이 심장, 폐, 다리, 척추 등 온몸의 건강을 지켜준다.

사람은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산다

사람의 다리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서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는 굴러가지 못한다. 늙으면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머리가 희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늘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리와 무릎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걱정해야 한다.

미국의 'prevention'이란 잡지에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장수하는 노인들은 걸음걸이가 바르고 가볍다. 두 다리는 몸무게를 지탱하는데 고층건물의 기둥과 같다.

사람의 전체 골격과 근육의 절반은 두 다리에 있으며 일생동안 소모하는 에너지의 70%를 두 다리에서 소모한다. 사람의 몸에서 큰 관절과 뼈는 다리에 모여 있다. 젊은 사람의 대퇴골은 승용차 한대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

다리는 사람의 교통수단이다

다리에는 온몸에 있는 신경과 혈관의 절반이 모여 있다. 온몸에 있는 혈액의 절반이 다리로 흐르고 있다. 두 정강이가 튼튼하면 경락이 잘 통하여 뇌와 심장과 소화계통 등을 비롯, 각 기관에 기와 혈이 잘 통한다. 특히 넓적다리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심장이 튼튼하고 뇌기능이 명석한 사람이다.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70이 넘은 노인이 한 번에 쉬지 않고 400m를 걸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또래의 노인들보다 6년 이상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노쇠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한다

樹老根先枯 人老腿先衰
(수노근선고 인노퇴선쇠)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말이다.

20세 이후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이 5%씩 사라지며 뼈 속의 철근이라고 하는 칼슘이 차츰 빠져나가고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탈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이 들어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진다. 노인들의 뼈가 잘 부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골두(股骨頭)가 괴사하는 것이다.

연철은 단련하지 않으면 강철이 되지 않는다

쇠는 단련해야 강해진다. 사람의 다리도 마찬가지다. 단련해야 한다. 다리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것이다. 다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단련이다. 다리를 강하게 단련하려면 걸어야 한다. 돈도 들지 않고 조금 부지런하면 된다. 걷는 게 보약이다. 이 가을부터 걷기를 시작해 보자.

회우가 낸 새책

한강포럼 30년사



한강포럼(회장 여상환)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강포럼 30년사'를 발간했다. 4×6배판 465페이지, 전4부로 나누어 제1부는 여상환 한강포럼 회장의 발간사와, 김용원 한강포럼 명예회장의 한강포럼이 걸어온 30년을 요약하고 있다. 제2부는 최재천 권오기 남시욱 김동길 여상환 김용준 노재봉 최서면 김종성 박석무 김형석 복거일 곽영훈 고혜령 최정호 박관용 최장집 김대중 이헌재 인보길 이영일 태영호 이인호 김동호씨 등 한강포럼을 거쳐간 사회명사들의 강연내용을 요약, 게재했다.

칼럼편에서는 지성한 김문환 김용원 안충모 권병현 김길자 이종덕 황인천 김용원 김환수 신갑순 김문웅 김종규 김진영 신현웅씨 등 명사들의 칼럼을 실었다.

제3부에선 한강포럼이 30년간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지에서의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연해주에 이르기까지의 발로 새긴 봉사활동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다.

제4부에선 2003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한강포럼의 연사 263명의 강연제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푸른솔刊 4×6배판 465쪽 값 35,000원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6.7.23 ~ 2026.8.25〉〈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 비
조남조(2026) 30,000원

회우동정

서옥식회우 외손녀 손예빈양 세계명문 런던예술대학 합격



서옥식 회우(본회 부회장·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의 외손녀 손예빈양은 2026년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 평가 결과 학부 기준으로 미술·디자인·패션 분야 세계 랭킹 1위 대학인 영국의 런던예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London/UAL) 패션경영학과에 합격, 재학중이다. 손양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사립고등학교인 Faith Christian Academy 3년 과정을 비롯, 캐나다 토론토의 영국대학입시 예비과정인 Birmingham International Collegiate of Canada 1년, 맨체스터大 대학입시 기초과정 1년을 각각 이수하고 UAL에 합격했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이민섭 회우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3번길 8-25
한용빌딩 402호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정훈 회우
(전 연합통신 편집부국장)
7월30일 별세, 향년 86세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책임 서 이 석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